

시론

설립 25년 만에 '국제화'로 성공한 대학, 리츠메이칸APU



주 정 민 전남대 대학원장

일본의 고도(古都) 교토에 자리한 명문 사립 리츠메이칸(立命館) 대학은 1900년 설립된 유서 깊은 곳이다. 간사이 지역을 대표하며 일본 사립대 중 최상위권의 명성을 자랑하는 이 대학은 개교 100주년을 맞은 2000년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오미타현 벳푸시에 국제화 특화 대학인 '리츠메이칸 APU(Asia Pacific University)'를 세운 것이다.

이미 확고한 명성을 가진 리츠메이칸이 언고도 없는 벳푸에 새로운 대학을 세운 이유는 명확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인재 양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일본 대학들은 지나치게 내국인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업은 일본어로만 진행됐고, 학생들은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리츠메이칸은 일본 안에 있으면서도 일본 같지 않은, 즉 국경이 없는 대학을 꿈꿨다.

APU는 학생과 교수진의 50%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모든 전공 수업을 영어로 개설해

일본어를 못 해도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0년대 초반 아시아 경제의 급성장 목격하며, 향후 세계의 중심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장악할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자 한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섞여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타 문화를 익히고 폭넓은 인맥을 쌓는 환경을 조성했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 모델도 신선했다. 당시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오미타현은 대학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리츠메이칸은 전통적인 교토를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터전이 필요했다. 대학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며 벳푸에 APU가 동지를 틀게 된 것이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 APU에는 10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다. 국제화 지표는 일본 내 단연 1위이며, 설립 25여 년 만에 수백 년 전통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일본 최고 수준의 사립대로 성장했다.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APU 졸업생은 '전혀 다른 종족'이라 불릴 만큼 인기가 높다.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생존력'을 높게 평가 받기 때문이다. 매년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

이 오직 APU 학생들만을 위한 채용 설명회를 열기 위해 벳푸 캠퍼스를 찾는다.

교육 방식도 철저해 '글로벌 감각'에 맞춰져 있다. 신입생은 1년간 의무적으로 다국적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본인과 외국인 학생이 한 방을 쓰기도 한다. 입학할 땐 한 가지 언어만 잘해도 되지만, 졸업할 땐 두 언어 모두 능숙해지도록 교육한다. 축제 기간에는 특정 국가의 주간을 정해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등 캠퍼스 전체가 국제화의 장이 된다.

APU와 벳푸시의 협업은 일본 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Global) 모델'로 꼽힌다. 유학생들은 지역 학교를 방문해 외국어를 가르치고 시민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전파한다. 벳푸시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국제 교육 현장'이 되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해외 유학생 20만 명 시대를 맞이한 우리 대학들에 APU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는 단순히 유학생 숫자를 채우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학생을 대학 내 고립된 커뮤니티에 가두지 말고, 우리 학생 및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동반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지역 소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APU의 실험은 우리 대학들이 가야 할 길을 미리 보여주어 준다.

기고

'함평의 디스토피아' 누굴 위한 국책사업인가



오 민 수 함평군변영회장·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

지난 3월6일, 천안 성환읍은 '축제의 장'이었다. 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천안축족장이전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는 '국가산단 성공완수 축전대회'를 열고 100만 도시천안을 향한 대업을 선포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그곳을 '하늘 아래 최고의 유토피아'라 칭송했고, 참석자들은 1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대기업 유치라는 장밋빛 미래에 환호했다.

그 시각, 우리 함평의 군민들은 차가운 새벽바람을 가르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로 향했다. 천안이 31년의 기다림 끝에 '신이 내린 땅'에서 잔치를 벌이는 동안, 함평은 187명의 실랑민이 발생하고 178만 평의 생토(生土)를 통째로 내놓아야 하는 '희생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천안이 꿈꾸는 31년의 유토피아가 찬란할수록, 삶의 터전을 뺏긴 함평군민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310년의 무게보다 무겁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정 지자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권한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사업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사례를 보라. 무안군에는 2천억 원 규모의 AI 스마트팜 패키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며 달래기에 나섰던 정부가, 왜 본연의 사업인 함평 이전에는 '공모'라는 벽 뒤에 숨는가. 천안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주거시설조차 배제한 채 '100% 대기업 유치'와 '실리콘밸리'를 꿈꾸지만, 함평은 대기업은 커녕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주 여건과 기본소득마저 구걸해야 하는 처지인가.

함평은 2천만 평 규모의 방역 규제 폭탄과 한빛원전 25km 이내라는 위험지구로 국가 자산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위험천만한 도박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험적 폭거이자, 이미 토지 75%의 보상에 협조하며 국가를 믿었던 군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함평의 25%가 천안의 100%를 멈춰 세울 것 천안의 추진위원회는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함평 이전 절차의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고 한다. 함평군민의 생존권을 행정절차의 부속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당한 피해보상과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함평

에서의 '정상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함평군민들은 3월12일 자 항의 서한을 통해 마지막 인내를 담아 14일의 시간을 주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5대 핵심 요구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문서 확인이 없다면, 즉각 모든 행정절차 중지 가져부와 사업 무효화 소송에 돌입할 것이다. 함평의 잔여 토지 25%는 천안의 대업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불공정 행정을 멈춰 세울 거대한 빗장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희생위에 세워진 변영은 모래성일뿐이다 국가는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공모'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보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무책임 행정을 즉각 멈추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놓여준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스마트팜 조성 등 함평의 소멸을 막아낼 정책사업을 문서로 약속해야 한다.

세종청사 앞을 메우는 장송곡은 소멸 위기에 처한 함평군민의 피 맺힌 통곡이다. 함평의 눈물을 닦아내지 않는 한, 천안의 변영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이 '성공완수의 각오'를 다질 때, 함평은 '사즉생(死即生)의 결기'를 다진다. 함평의 희생을 딛고 선 유토피아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취재수첩

막 오른 선거, 정책·비전으로 경쟁해야



김 상 호 지역특집부 부장

6·3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사회에서는 과거 논란이나 문제 제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무안 역시 다양한 주장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군민들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공방이나 자극적인 폭로보다 무안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사안의 경우 과거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소명되거나 정리된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때마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아니

나"는 반응도 나온다. 이러한 소모적 논쟁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

한 주민은 "과거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무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대 활동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공존한다. 주민들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대책, 실질적인 보상 방안, 그리고 무안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유권자들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자극적인 주장이나 진영 논리에 휘둘리기도 하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려는 이른바 '학습된 유권자'들

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군민들의 주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네거티브 공방만으로 표심이 움직이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러한 민심의 변화를 읽어야 할 시점이다. 상대에 대한 비판에 머물기보다 무안의 미래 전략을 놓고 당당히 경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결국 선거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느냐를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 무안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갈등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비전이다. 사법적 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성숙한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대도약의 전환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데이터센터공원에 들어서며, 2028년까지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그래픽 처리장치 등) 1만 5천장 우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3대 강국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산업·연구계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국산 반도체 활성화,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 확대 등 정책 과제들도 수행, AI 생태계 성장을 지원한다. 실제로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클리위, KT 등 굴지의 대기업이 망라돼 관심을 모은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조9천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산 능력을 보유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국가 AI컴퓨팅센터가 가동되면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연계되는 환경이 갖춰져 전남·광주가 글로벌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공지능 고속도로의 인프라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온다. AI 에너지 수도, 미래 신산업의 중심으로 전남광주특별시대가 뜨는 중대 전환점을 맞는 셈이다.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의 마음줄 투자를 발판 삼아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본격화한다. 올해 3분기 착공 일정 등 일체의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삼성SDS,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해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의지가 강력하다.

과기부는 SPC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세부 요건을 구체화한 뒤 금융권 출자 승인 절차를 밟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확정짓는다. 차세대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참여를 촉발하는 선순환 체계를 완성하길 기대한다.

무안공항 사고, 공사비 아끼려고 만든 불법시설물이 키웠다

12·29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이 공사비를 아끼려다 만든 불법 시설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불법 구조물을 방치해 179명이 숨진 대참사가 사실상 인재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항공안전 취약분야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무안공항의 참사는 활주로 설계 당시부터 잘못돼 있었기에 사고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인 로컬라이저는 항공기가 활주로 중앙에 정확히 착륙하도록 활주로 중심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행안전 시설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다. 방위각을 제공하는 안테나와 안테나를 지지하는 기초구조물로 구성된 로컬라이저는 전파 방해를 막기 위해 활주로 최상단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부러지기 쉬운 구조 성능을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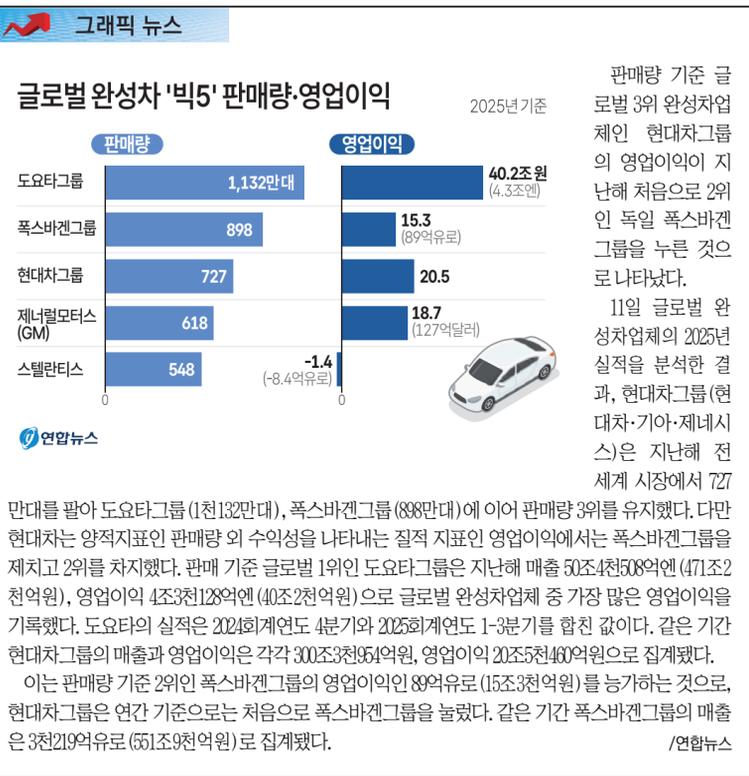
하지만 국토부는 무안공항을 비롯한 일부 지방공항 건설 시 활주로의 종단안전구역에 토공사 물량을 줄임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

기 위해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를 뒀다. 이에 따라 로컬라이저 설치를 위한 활주로 최상단과의 높이 차를 둔덕을 쌓아 맞추면서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무안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2008년 6월 취약성 검토도 없이 콘크리트 둔덕 설치를 허가한 이후 2007년 한국공항공사(KAC)가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을 했는데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KAC에 공항운영명령서를 발급,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실시 계획 검토, 승인 업무와 준공 확인 전 사용자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사후약방문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아직도 무안국제공항에는 유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호남의 판관이 무안공항의 빠른 재개항이 분명 필요하지만 지난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